

남북한 대학간 학술 교류 활성화 방안

남 성 욱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지난 2월 말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정부 차원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실무협의 및 민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북측 민족경제연합회 '일꾼'들과 실무 협의 후, 만찬이 끝날 무렵 술 한잔 한 것을 핑계로 몇 일간의 동행으로 친분이 생긴 배 선생에게 가볍게 물었다.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려면 자주 현장을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통일 통일하지 말고 배우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수들이 상호 방문하여 토론하고 대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수 및 학생들이 상호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 달라"고 떼를 썼다. 배 선생은 한참을 듣고 나더니 일단 "일 없시유"라고 평안도 사투리로 우선 답변을 하고 나서 "남 선생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대답하였다.

이유인 즉 남한측에서 방북 신청이 오면 당 및 해당 부서 — 예를 들어 IT는 전자공업성, 환경문제는 국토보호성 — 및 국가보위부에서 초청장 발급 심사를 하는데 교수 및 학생 상호방문,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학술 교류는 이들 기관에서 초청장 발급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었다.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들여보니 세 가지인 것 같았다.

첫째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표현해서 돈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분야의 인사가 방북 하면 1인당 상당한 액수의 입장료(Entrance fee)를 내는 데 학술 교류는 이러한 입장료가 적어서 관심이 다른 분야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술 관련 사항은 전반적으로 남측의 수준이 우세함으로 교류를 진행할 경우 북측의 낙후된 수준이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 쓰이는 남북한 대학간 및 학생들간의 학술 교류는 조만간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는 북한이 남측의 붓물 같은 요구를 수용할 물질 능력이 부족하다. 북한은 통제 사회인만큼 외부에서 방문객이 입국하면 인원과 차량이 제공되어 24시간 수행(?)에 들어가는 데,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 회복 조짐과 동시에 외국 기업인 및 국제기구 인사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남측 교수 학생들을 접대하기는 능력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사실 이런 이유는 작년 6·15 공동선언 이후 붓물처럼 터져 나온 대학간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원인을 분석한 바 있어 어느 정도는 예측하였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물론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사전 분위기 조성
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예비 행사 중 하
나가 남측의 교수 학생(100~300명 규모)들이 북
측을 방문하기로 이미 북측에 제안한 한 바 있기는
하나 북측이 선호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의 입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것이 소득이
라면 소득이었다. 그날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는 필자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북한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학술교류를 성사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다. 남측
과의 대학교류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여타 분야만
큼(?) 얻고 북한의 낙후된 학문적 현실을 노출시키
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서 남북한 대학간의
학술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고민하였
다. 우선 과거부터 추진해 온 기존의 학술 분야를
재조명하고 나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

II. 학술교류 추진의 연혁

분단 이후 남북간의 대화는 크게 시기별 및 대화
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기별로는 4단계로 구분
하여 볼 수 있다. 1단계는 1950~60년대의 남북대
화의 단절기, 2단계는 1970년대의 남북 정권 당국
간의 대화의 태동기, 3단계는 1990년대의 남북대
화의 고양기 등이다. 대화 주체별로는 정권 당국간,
사회 각 분야별, 통일운동, 종교활동 과정의 일환
및 학술·문화활동 등 순수 민간차원의 남북대화
등 5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대학간 학술교류 활성
화 방안은 학술·문화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학술·문화교류가 반드시 대학을 통해 이
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비교적 이념성이 적은 예
술 및 종교인들과 연관된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교류·협력의 장소도 남북한 국내보다

는 일본 중국 등 제 3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대학이 이러한 행사에 관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대학은 민간이면서도 정부의 관할에 놓여 있는 특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 정부가 쉽게 접촉을 승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간 교류의 연혁은 학술·문화 교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1. 6·15 공동선언 이전

학술·문화활동 분야의 남북 주민간 접촉과 대화 등 교류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에서 이루어졌는데 1990년 초부터 시작되어 활기를 띠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학술회의는 약 60여 차례에 이르는데 대체로 민족통일 문제를 주로 주제로 하였다. 해외에서 개최된 학술회의는 남북한이 단독으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남북한이 참가하여 상봉한 사례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회의'('91. 5. 27~31: 코펜하겐), '국제전통의학 학술대회'('91. 10. 18~22: 북경), '제 2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93. 4. 16~17: 버클리) 등이 있다. 한편 후자로는 '제 3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90. 8. 2~5: 오사카), '제 6차 동지나해 해양학술회의'('91. 4. 22~27: 후쿠오카), '제 2차 아시아사학회 회의'('91. 5. 20~28: 길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엄'('91. 5. 31~6. 2: 도쿄), '91 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91. 8. 20~22: 연길),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회의'('92. 6. 17~18: 파리), '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학술회의'('93. 8. 28~31: 북경),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평양여성토론회'('93. 11. 7~8: 평양), '94 코리안 컴퓨터 국제학술대회'('94. 8. 6~8:

연변), '5차에 걸친 남북 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1차, '95. 7. 31~8.1: 북경, 2차, '96. 9. 13~15. 3차, '97. 8. 29~30, 4차, '98. 2. 20~21, 5차, '99. 10. 27~28, 장소 모두 북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특히 남북 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는 지난 '95년 이래 남북한 학자들이 참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유일한 학술회의라고 볼 수 있다. 이 학술회의는 남측의 한국통일학술포럼과 북한의 사회정치학회가 교류 장구를 갖고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단 남북한 학자들이 서로의 주장과 입장이 매우 상이할 지라도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물론 학술회의에서는 서로의 발표를 청취하기보다는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여도 성과가 미진하였다는 지적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중앙 방송은 제 5차 남북 해외학자 통일회의와 관련 1999년 11월 11일 뒤늦게 '남측 대표들과 해외측 학자들은 나라의 통일이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불변의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혀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동 회의를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

이외에도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학술회의가 지난 '90년 이래 17번 정도 개최되었다. '동북아 지역경제협력 포럼'('92. 8. 25~28: 블라디보스토크), '니가타 동북아 경제회의'('98. 2. 7~19: 니가타), '제 8차 동북아 경제포럼'('98. 7. 28~29: 도토리) 등이 대표적인 회의였다.

2. 6·15 공동선언 이후

6·15 공동선언 4항은 남북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



평양 의학 과학 토론회



남북학자 포럼

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남북한 대학간의 학술교류를 남북한 당국이 인정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상회담 기간 중 학술 교류에 관한 것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었다.

한편 2000년 9월 27일에서 30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 3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남북간 교수·대학생의 상호 시범적 방문 문제를 제 4차 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 4차 회담에서 이 문제가 합의되지는 못했다. 6·15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각 대학의 총학생회에서는 경쟁적으로 북한 대학과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은 대학간 교류를 추진하는 데 남측에 많은 경제적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국내 대학들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웠다.³⁾

요컨대 정상회담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학간 학술 교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주요 학술교류는 '세계 속의 한국어 대비연구 국제학술토론회' (8. 11~13: 북경), '조선장학회 창립 100주년 기념 고대사 심포지엄' (11. 24: 도쿄), '남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12. 19~20: 연길) 등으로 이들은 정상회담에 관계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연변과기대(총장: 김진경)가 평양에 '과학기술 정보대'를 설립한다고 발표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북한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III. 남북 대학간 학술교류의 현황 및 특징

1. 낮은 접촉 성사율

학술 분야에서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 접촉은 1986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 말까지 신청 556건(3,923명), 승인 508건(3,273명), 성사 180건(2,036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도에는 신청

〈표 1〉 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 신청 현황

단위: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성사	성사율(%)
1989	11(11)	10(10)	-	-
1990	50(301)	47(298)	13(192)	27.7
1991	77(505)	71(498)	21(348)	29.6
1992	71(319)	65(308)	10(146)	15.4
1993	35(190)	34(190)	9(50)	26.5
1994	28(209)	22(195)	6(91)	27.3
1995	36(367)	37(339)	19(282)	51.4
1996	44(513)	39(280)	21(196)	53.8
1997	34(414)	28(399)	13(321)	46.4
1998	49(173)	46(175)	21(74)	45.7
1999	45(624)	42(314)	21(276)	34.9
2000	77(300)	67(267)	26(60)	38.8
합계	557(3,926)	508(3,273)	180(2,036)	35.4

출처: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각 월호

77건(300명), 승인 67건(267명), 성사 26건(60명)으로 전년보다 접촉 신청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성사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⁴⁾ 다른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비해 주

민 접촉면에서 신청에 대한 성사 비율이 높은 편이나 방북 성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표 1〉). 이는 북한이 통일전선 전술 차원에서 학술·교육과 같은 소수 지식인 방북보다 다양한 계층의 방북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평가된다.⁵⁾

지난해에는 역설적으로 정상회담 때문에 학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간 성사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학술·교육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남북관계의 명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북측이 정상회담 등 관련 행사 때문에 학술 분야의 접촉을 기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1년 상반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금년 상반기는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미간 냉각 기류가 형성되면서 남북한간에도 전반적 교류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술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2. 중국 등 제 3국을 통한 간접 교류 증진

남북간의 학술 교류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 접촉은 중국 지역의 동포 학자·단체들의 북한과의 교류 경험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지역

〈표 2〉 남북한 직접 왕래 학술현황

행사명	기간/장소	주최	비고
제 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91. 11. 25~29, 서울	서울 세미나 실행위원회(남)	북한 여성계 인사의(15명) 최초 남한 방문
평양 동북아 경제포럼	'92. 4. 28~5.4, 평양	대외경제협력추진위(북) 동아시아경제연구회(미) 일본 실행위원회(일)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구상안에 대한 토론 및 시찰
제 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 세미나	'92. 9. 1~6, 평양	평양 세미나 실행위원회(북)	남한 여성계 인사의(30명) 최초 북한 방문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국제 토론회	'93. 11. 6~9, 평양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 보상대책위(북)	종군위안부 피해 보상문제 협의

출처: 통일부(1999), 『통일부 30년사』

“

남북한 학술교류의 주제는 다소 특정 문제에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일 많이 다룬 주제는 남북 해외학자 통일회의에서 주로 다루는
체제와 이념, 통일 방안 등 정치적인 사항들이다.

”

에서 공동 학술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제 학술에 남북이 동시에 초청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⁶⁾ 분단 이후 2000년 12월까지 학술교류를 위해 남북한 주민이 직접 왕래한 경우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4건에 불과하였다.

학술 교류가 제 3국을 통한 교류에 치중되는 것은 남북한이 직접적인 왕래를 통한 학술 교류를 꺼린다는 사실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중국 연변 지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 학자 및 단체들의 과거 북한과의 교류 경험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이 남북간의 학술교류의 성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⁷⁾ 또한 북한이 남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상부의 지시를 얻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주제의 편중성

전체적으로 남북한 학술교류의 주제는 다소 특정 문제에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일 많이 다룬 주제는 남북 해외학자 통일회의에서 주로 다루는 체제와 이념, 통일 방안 등 정치적인 사항들이다. 예를 들어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근본담보”(‘98년 회의 김혁철,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우리 나라 통일 문제의 주체적 고찰과 그 해결의 정책적 요구”(‘99년 회의, 원동연, 북한 사회정치학회) 등이다. 물론 경제 분야

의 교류 방안 등에 관한 발표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치 분야가 중심이 되었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 주로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다. 지난 '90년이래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는 17차례나 개최되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각종 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경제 분야의 각종 학술회의를 지난 '91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나진·선봉지역의 투지 유치 활동과 연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북한의 대외 개방 지역인 나진·선봉지역의 투자 여건과 동 지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지원 정책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권 형성과 관련되어 각국의 학술 대회 참여자도 정부 연구소의 실무자와 관료가 상당수가 차지하여 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⁸⁾

세 번째로 자주 이루어진 주제는 여성 문제다. 특히 일본의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북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남북한 여성들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 하면서 학술 회의를 개최하였다.

네 번째 주제는 북한의 IT 분야 관심 고조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과학기술과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91년에 한글 언어 통일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역사학 환경학 등으로 주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IV. 바람직한 학술교류 활성화 방안

1. 남북 당국자간 학술교류 활성화에 합의

“남북교류·협력분과위”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대상 분야를 과학·기술, 교육, 환경, 예술, 보건, 체육 및 출판보도 등 7개 분야로서 구체적인 학술분야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당국간 회담을 통하여 남북대학간 학술교류 활성화에 조속히 합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학술교류협의회’(가칭)와 같은 별도의 협의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협의회에서는 남북간 학술교류 추진과 관련한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 방식 등을 협의하며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를 알선해 주는 창구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⁹⁾

2.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현재 북한 연구는 북한 연구 자료 및 원전 등에 대한 접근의 곤란함으로 연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남측 내부의 부실한 운영 체계와 미흡한 제도화 등이다. 물론 과거와 달리 보안 시설 허가서만 있으면 노동 신문도 정기 구독할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연구자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탄력적 운영 및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시·훈령이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순수 학술 목적의 경우 원전의 접근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일부 자료실 등을 확장하도록 한다. 각종 서류 제출 등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북한 접촉 승인 신청 절차 등도 대폭 축

소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간 학술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확충도 필요하다. 2001년 상반기에 학술진흥재단에서 남북한 학자가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지원(2,000만원 이내)하고, 학술 교류 프로젝트를 공모(400만원 이내)하는 등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나 기금의 규모가 확충되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술진흥재단에 남북한 학술 교류만을 담당할 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학술 교류의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각종 재정적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토록 한다.

3. 북측의 관심 분야 중점 교류 추진

남북한 학술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최근 북측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무래도 실용적 측면이 강한 정보 통신(IT)을 비롯한 과학기술 및 경제 협력 등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역사학 정치학 및 언어학 등도 관심이 있지만 이러한 분야는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등 정통성을 주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전자의 분야는 북측이 남측의 발전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 받기를 원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북·미 관계 악화로 남북한의 교류가 답보 상태에 처해 있어도 꾸준히 남측 인사의 방북 초청장을 발급하는 분야가 정보 통신 분야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분야 및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성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 협력이 진행되면서 남북한 경제·경영학 분야의 이질감이 노출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

〈표 3〉 북한의 시장교육 일지

시기	교육 내용	주 관	장 소	비 고
1998년 6~12월	- 통상법 · 국제경제학	UNDP	북경 · 호주	총 경제관료 110명 참가
1999년 4월	- 자본주의 경제학	UNDP	평양	IBRD 후원
1999년 6월	- 시장경제 교육 - '경제관리 훈련' (Economic Management Training)	UNDP	미국 워싱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호주 연수 병행
1999년 12월	- 회사법 및 파산법과 함께 북한측의 추가 요청으로 국제계약 및 법무법인 (Law Firm)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아시아재단	북경	북한측에서 입법담당관 · 대외무역 담당 실무관리 및 법률학자 등 10여 명이 참석
2000년 6월	- 자본주의 상법	UNDP	북경	김일성 대학 부총장, 최고인민회의 등 고급관료 15명

주의 시장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를 대상으로 무역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외국학자를 초청하여 국제 통상 문제를 배우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 교육은 남북한간의 경제·경영학 분야의 교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표 3〉). 특히 이러한 교육이 주로 중국 및 미국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 학자들의 참가를 타진해 볼 수 있다. 남측은 언어 장벽이 없기 때문에 북한측에서도 신지식 습득에 효과적이며 자신들이 '철천지 원수'로 여겨 온 미국보다는 남측의 같은 한민족이 훨씬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4. 직접 교류와 함께 학술지 상호 게재 등 간접 교류 병행

학술 교류라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얼굴을 보면서 논의하기에는 어렵다. 상호 왕래 등 직접 교류를 추진하면서 상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상호 중요한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2001

년 상반기에 SK 텔레콤에서 발행하는 IT 관련 저널에 북한측 학자가 논문을 게재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초기에 상호간 남북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게재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이념 성격이 강한 정치학 및 경제학을 제외한 순수 학문이 적합할 것이다. IT는 물론 과학기술 및 국어학 역사학 등 분야에서 시도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학술진흥재단은 이러한 상호간 학술지 게재를 장려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바람직할 것 같다.

5. 국제적 연계 교류 추진

북한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측과의 교류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타락한 자본주의로부터 보호하여 황색 바람의 침투를 막는 '모기장'을 철저히 치는 전략을 고수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직접 교류는 일정 기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측이 다소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제 3국과의 연계를 시도하여 추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지금까지도 몇 차례 추진되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남북한 학자를 공동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시도를 좀더 확대하여 UN 및 북한이 가입을 희망하는 ADB(아시아 개발은행) 국제기구와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 학자들이 제 3국을 통한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이다. 남북한 직접 교류에 나올 경우 보위부 및 노동당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나 제 3국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에는 다소 간섭이 줄어든다. 최근 북미 관계의 냉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 및 축산 기술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2달 이상의 장기 연수를 받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수에 남측의 농업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적 연계 방안에는 과거 동·서독 학술교류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북한이 학술 교류에 나서는 의도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 이념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다. 둘째는 단순한 체제 선전의 장을 넘어 학술 정보의 교환 및 수집의 무대로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이유는 학술 교류가 여타 사회 문화 교류와 달리 일과성·이벤트성으로 전개되지 않고 지속성·체계성의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학술 교류는 이제 1단계의 초보적인 교류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제 다양화되고 제도화된 2단계를 맞아야 할 시점이다. 사실 학술 교류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통일문화' 기반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는 협력의 가능성이 여타 사회·문화 교류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다. 5년 동안의 우리말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2000년 8월 『남북한 컴퓨터 용어 통일사전』이 출판된 것이 그 예다.¹⁾

물론 이러한 예는 북한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설립하면서 대학 설립의 취지로 "진보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민경제와 문화를 건설할 지도력이 있는 고등기술인들을 발달시키는 것"을 『북조선 법령집』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¹¹⁾ 이는 북한의 학문이 이념과 실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이념은 주체사상이다. 따라서 학술 교류의 목적이 주체사상과 부합되어야 남북간 대학 및 학술 교류가 성사될 수 있다. 남측으로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교류에 참석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따라서 일정 기간은 이러한 이념이 강조되는 학술회의의 성사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남북한 교류는 상당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측의 내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한편 북측의 의도와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류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절차가 번거로우며, 특히 북측 특유의 고압적인(?) 자세와 무리한 금품 요구는 일시에 실망감을 갖게 만든다.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류에 나설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감이 수시로 찾아온다. 그러나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추진할 때 학술 교류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당국간 회담에서 그리지 못한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여백을 채워 줄 것이다. **☐**

■ 주 ■

- 1) 노중선(2000), 『남북대화 백서 : 남북교류의 갈등과 성과』, 한울아카데미, pp. 9~26.

- 2) 연합뉴스(2001. 2), 『2001 북한연감』, p.288.
- 3) 강원대의 경우 유일한 분단 도라는 명분을 내세워 원산 농대와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복측의 요구를 전부 보내지 못함으로써 중단된 상태다.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는 2000년 10월 김일성 대학 주체사상학과 학생들과의 주체사상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은 없는 상태다. 성균관대는 지난 1998년 4월 자매결연을 맺었던 북한의 고려성균관대의 김효관 총장에게 서울 방문 초청장을 보내는 한편 김일성 종합대학·김책 공대 등과의 자매결연을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신문사 차원에서도 북한대학 방문 신청이 줄을 이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강대·동국대·홍익대 학보사는 학보 창간을 기념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교육 정책과 대학생 생활상을 취재키로 준비하였다.
- 4) 통일부(2001. 2), 『2001 통일백서』, p.133.
- 5) 고정식(2000. 12),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

문집 제 2호』, "남북한 경제·경영분야 학술교류를 위한 여건 형성 방안", p.155.

- 6) 통일부, p.133.
- 7) 임강택(2000. 12),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 2호』, "남북한 경제·경영분야 학술교류 추진을 위한 당면과제", p.171
- 8) 고정식, p.157.
- 9) 임강택, p.181.
- 10) 고정식, p.159.
- 11) 김동규(1999), 『북한학 총론』, 교육과학사, p.255.

남성욱

고려대 경제학과 및 등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가정보대학원 부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로서 북한 경제포럼 이사, 북한농업연구회 이사로 활동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분야 협력 방안", "북한의 인터넷 사 용에 관한 의식과 남북 협력 방안" 외 다수가 있다.